

퇴진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김종진

박근혜 퇴진 투쟁

2~3면

한일군사협정,
국정 교과서 폐기하라

4~5, 8면

전교조·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박근혜 퇴진 파업 결정

6면

철도 파업
야당들의 파업 종료
종용을 거부하다

7면

박근혜의
즐기세포 환상

5면

세월호 7시간

4면

박근혜 퇴진 운동 논쟁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 투쟁이어야 한다

김문성

11월 19일 제4차 범국민행동은 전국에서 90만 명이 넘게 참가했다. 연 2주째 수십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모인 것이다.

여전히 노동조합과 좌파가 행진을 이끌고 있다. 수능을 끝낸 청년들을 포함해 중·고교생도 열정적으로 참가한다. 밤 늦게까지도 수십만 명이 청와대 방향 행진에 동참해 퇴진 구호를 목청껏 외친다. 가장 인기 있는 구호는 “즉각 퇴진”, “구축”, “새누리당 해체” 같은 것들이다.

이런 시위가 거의 범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국정수행 지지도는 3주째 5퍼센트였다가 이번 주에는 4퍼센트로 내려앉았다. 부정평가도 최대치인 93퍼센트이고, 새누리당 지지율은 12퍼센트로 추락했다.

리얼미터 조사나 <중앙일보> 조사를 봐도 박근혜 퇴진 지지는 80퍼센트에 이른다. ‘즉각 하야와 ‘탄핵’ 등을 구분해서 물어 본 <중앙일보> 조사에선 ‘즉각 하야’가 40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이런 압력 때문에 여론과 정권 사이에서 눈치 보며 고심하던 검찰은 결국 20일 박근혜를 사실상 피의자(내용상 ‘주범’)로 규정한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대청와대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수사 내용 자체는 기만적인 내용을 여럿 품고 있고 ‘정치 검찰’을 전혀 믿을 수 없지만, 이 발표가 박근혜에게 타격을 준 것도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 하나의 이반이 공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정권의 철저한 하수인이었다.

결국 검찰의 이례적 태세 전환으로 청와대가 휘청거렸고, 국회에서의 탄핵 국면이 시작됐다.

청와대의 검찰 통제 라인인 민정수석과 검찰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잇달아 사표를 냈다.

검찰총장에게도 동반 사퇴 압력을 가한 의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무엇보다 검찰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다. 박근혜는 닷새 동안 사표를 수리하지도 반려하지도 못하고 있다. 사표 반려 오보 소동까지 벌어졌다.

또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졌다. 12월 초순에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표를 확보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출마 선언도 한 적 없는 김무성이 불출마 선언을 하며 탄핵의 선봉으로 나섰다. 유승민은 “청산 대상과 야합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습다. 김무성은 개헌을 고리로 현재의 야권을 쪼개는 정계 개편을 시도해 집권 연장을 노리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유승민은 지난해 초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친박”이라고 아부했던 자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공개적으로 분열하기 시작한 것은 운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 탄핵 절차에 종속되면 안 될까?

2주 연속 1백만 명이 거리로 나오는 상황에서도 박근혜가 물러나길 거부하고 한일군사정보협정,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 등을 추진하고 노동 개악 등을 포기하지 않는 걸 보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바라며 거리에 나온 사람들 중엔 갑갑함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다.

운동 일각에선 국회 탄핵으로 ‘강제’로 박근혜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문제가 해결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첫째, 박근혜 퇴진 운동과 여론의 중심이 거리에서 국회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당장 박근혜 폭로를 쏟아내던 언론 보도들에서 국회 동향 보도의 비중이 커졌다.

특히, 탄핵을 하려면 새누리당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일부가 정치적 주체로 나서는 것을 용인하게 되고 이는 박근혜 악행의 공범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영광을 누리던 새누리당 지도자들이 뻔뻔하게 탄핵 가결의 열쇠를 쥔 사람들마냥 비장한 모습을 연출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런 비박계 인사들을 붙잡느라 여념이 없다. 이 과정에서 내각제 개헌 등 밀약들이 벌어질 것이다. 여권의 공개적 분열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이면도 봐야 하는 것이다.

김문성은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탄핵 추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분노를 표시 ... 국가가 불행한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 빨리 탄핵의 틀 속에 집어넣어야 국민들의 분노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새누

리당이 탄핵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새누리당에 표를 구걸하지 말라고 다른 야당들에게 요구한 것은 옳다. 그러나 심 대표가 야 3당이 공조해 국회 탄핵 절차로 가기로 합의한 것에 이미 이런 문제들의 씨앗이 있었다는 점도 봐야 한다.

현재로 넘어간 뒤에도 마찬가지로 운동의 추이를 현재 절차에 종속시킬 수 있는 압력은 여전할 것이다.

둘째, 지금 국회 탄핵으로 즉각 퇴진 요구를 희석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탄핵소추가 가결될 경우, 박근혜의 권한이 정지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탄핵심판 절차로는 박근혜의 임기 중도 퇴진이나 온갖 개악의 철회가 하나도 보장되지 않는다.

검검의 안전판

우선,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가 원고(검사)가 돼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를 탄핵해 달라는 것이다. 그때 현재에서 검사 구실(소추위원)을 맡는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지금 이 자리는 새누리당 권성동이 맡고 있다. 탄핵소추안 자체를 새누리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죄목이 단순한 측근 비리나 직권남용으로 협소화될 수 있다.

또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노무현 탄핵시 현재 판례를 종합할 때, 대통령 탄핵은 헌법상, 법률상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다. (노무현도 선거법 위반은 인정됐다.)

박근혜 퇴진이든, 탄핵이든 그것은 명백히 정치적 사안인데, 형식적 법 위반을 따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제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

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의 헌법재판소 구성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것도 봐야 한다. 최근에만 해도,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 진보당 해산, 동성애 차별 군형법 합헌, 낙태 처벌 합헌, 몇 년 더 거슬러 가면 물대포 직사 합헌 등 쓰레기 같은 우익적 판결의 본산이었다.

이들은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에 불명확한 점이 많다고 시간을 끌 것이고, 최악의 경우 심판 절차를 중지시키고 재판을 지켜보자고 할 수 있다. 이미 증거를 상당히 인멸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근혜가 대면조사까지 계속 거부하면 혐의 입증에 쉽지 않아 재판은 시간을 마냥 잡아먹을 수 있다. 박근혜와 우파에게는 검검의 안전판이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 상황에서도 정부와 현재 등을 압박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야당을 무비판적으로 대하며 대중 동원과 투쟁을 뒤흔들고 미룬다면, 권한대행인 황교안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다. 황교안은 망신살이 뻗칠대로 뻗친 박근혜보다는 더 자유롭게 나쁜 정책들을 지속하고 공안탄압 등 역습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 추진으로 가는 것의 속내는 무엇일까? 이들은 탄핵소추를 가결해 박근혜의 권한을 정지시킨 것으로써 자신들이 운동의 요구를 국회에서 대변한 것으로 체면을 세우고 정국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사태의 책임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현재에 넘겨 버리는 것이다.

총리 교체에 목매면서 퇴진 요구와 거리를 두고 영수회담이라는 무리수까지 두던 민주당이 총리 교체보다 탄

핵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박근혜 임기가 길어지고 반박근혜 반감이 유지되는 것이 내년 대선에서는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속내일 공산이 크다. 바로 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운동 초기에 박근혜 중도 퇴진을 반대했다.

그래서 무책임한 것이다. 박근혜 퇴진 요구는 온갖 개악들을 철회·중단 시키자는 염원이기도 한데, 주류 야당들의 탄핵 프로세스에선 그런 전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야당들도 일정하게 운동의 성장을 필요로 한다. 현재 자기들이 대 여권 관계에서 일정한 주도권을 쥔 것은 운동이 급부상한 덕분이기 때문이다. 대신 운동을 자신들의 정국 주도를 위한 부속물로 만들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국회 탄핵 절차는 위험한 도박이다. 만에 하나, 도저히 쓸모없어진 박근혜를 지배자들이 중도 퇴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72년 미 의회의 닉슨 탄핵 시도는 결국 닉슨 체제의 광범한 부패망이 아니라 닉슨 개인의 거짓말만을 문제 삼아 제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광범하게 시스템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운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광범한 운동을 건설해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이 체제의 광범한 문제들을 제기하며 스스로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필요한 이유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주류 야당들의 무책임성을 비판하고 국회 논의와 무관하게 계속 “즉각 퇴진” 운동을 건설하겠다고 선포해야 한다. 이 점에서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국회 탄핵 공조에 합류한 것은 옳지도 현명하지도 않다.

※ 기사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항의 시위는 계속돼야 한다

지금 박근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지율이 몇 주째 5퍼센트 이하인 사면초가 신세도 위협이겠지만, 지배계급의 한 주요 부분이 그를 버리기로 한 것이 더 큰 위협일 것이다.

이는 검찰이 그를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방증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무성이 야당들의 탄핵소추에 가세하기로 한 것으로도 방증된다. 한때 친박 좌장이었던 김무성의 집안 배경을 보면 그가 심중팔구 지배계급 주요 부분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친은 (주)전방 회장이었고, 형은 경총 회장이었고, 장인은 경향신문 사장과 공화당 국회의원이었고, 사돈은 바로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이다. 조카장인과 조카사위 등등 다른 친인척 상당수도 막강한 세도가들이다.

한편 지배계급의 다른 주요 부분은 박근혜 탄핵소추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삼성 이재용과 SK 최태원 등등은 박근혜의 몰락이 자신들의 (재)수감과 대가성 사업의 곤란을 동반할 것이므로 탄핵소추에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자신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다. 대통령은 단순히 자본가 계급의 집행 책임자인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국가기관으로, 그 자신이 지배계급의 주요 일부분이다.

따라서 탄핵 의결과 현재 심판, 또 이후 대선까지 전체 정치과정이 지배계급의 내분으로 점철될 것이다. 그리고 우여곡절과 함정이 있어서 국민의 대중을 당혹케 할 경우가 왕왕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은 항의 운동이 계속돼야 하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가 퇴진해야 하는 이유 자체를 새삼 생각해 봐야 한다. 분명



거대한 대중 시위가 지배계급의 분열을 낳았다.

박근혜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적 부패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물러나야 할 유일한 이유인가?

온갖 못된 짓

그는 불황을 조금치도 완화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불황의 효과를 노동계급과 대다수 여성, 서민에게 떠넘겨 우리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조선업 고용조정(해고와 비정규직화, 임금 삭감)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등은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이보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도 사례가 너무 많아져 제목 나열만 하는 것도 불가능할 지경이다.

그는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매우 후하고 관대하게 군사적 이득과 편의를 보았다.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협정은 그 최근 사례일 뿐이다.

그는 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합법성을 박탈하는 등 정치적 기본권과 노동기본권

등을 일부 유린해 왔다. 국민 속에서 ‘권위주의로의 회귀’라는 공포심을 조장하려 애쓴 책임이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지금 야당들은 탄핵소추를 추진함으로써 박근혜 반대 운동의 주도권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려 하고 있다. 그들의 손안으로 운동의 주도권이 넘어가면 박근혜의 온갖 못된 짓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되돌려 놓아질 것이다.

특히, 시장 지향의 경제개혁과 노동개혁 등 노동력 착취와 관련된 이슈들은 대부분 거의 손도 안 댈 것이다. 이 와중에도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라.

미·일 제국주의를 돕는 외교적 조처들도 겹치레에 불과한 손질만 한 채 본질적으로 건재하게 될 것이다.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다른 사회집단들은 박근혜의 퇴진이 단지 국가 기구 최상층부의 몇몇 인물들만의 교체로 끝나지 않고 폭넓은 개악 철

회를 수반하도록 박근혜 퇴진과 자기를 자신의 조건 개선, 둘 모두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둘의 연결은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하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최순실 딸 정유라가 연루된 이화여대 사례는 이례적일지 모른다.

희망은 막연한 낙관 아니다

박근혜 퇴진과 대중의 고유한 부분적 요구들이 서로 연결되려면 운동이 훨씬 더 폭넓은 계급투쟁으로 확대돼야 한다.

그래서 단지 일부 국가기관 상층부를 차지한 인물들만을 교체하는 것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도록 발전해야 한다.

물론 박근혜가 즉각 퇴진하는 것 자체만도, 또 그가 탄핵으로 물러나는 것 자체만도 진보이다. 모두 대중 항의 운동의 효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자는 현재의 운

동을 흠뻑 지지한다.

하지만 진보가 더 이상의 진보를 보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박한 낙관이다. 박근혜가 물러나도 황교안 같은 ‘공안’통이 어떤 권모술수와 야비한 계략으로 박근혜 퇴진 운동 내의 특히 진보·좌파 진영을 이간해 각개격파하려 들지 고려해야 한다.

통치자들, 특히 그들을 배출한 지배계급은 허수아비가 아니다. 정치투쟁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적들도 한다.

게다가 야당들은 체제의 프레임 안에서 활동하고 그걸 지키는 데 헌신하기로 공적 약속을 한 세력이다. 그러므로 조만간 항의 시위를 중단시키려 들 것이다. 마치 온건한 노조 지도자가 교섭을 위해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쟁의를 중단시키는 것처럼 말이다.

1987년 6월항쟁과 뒤이은 7~8월 대파업처럼 혁명적 좌파와 노동계급이 분출했던 대중 투쟁도 그해 말 대선에서 노태우가 승리하고, 1990년 1월 김영삼의 배신으로 3당 합당이 벌어지고, 1991년 분신정국에도 노태우를 퇴진시키지 못하고, 1992년 연말 김대중이 패배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1992년 9~10월경 노태우가 민자당을 탈당하고 중립 내각이라는 게 들어섰지만, 중부지역당(소위 민애전) 사건 등 마녀사냥은 극에 달했다. 이 글의 필자 자신은 당시에 다른 조직 사건으로 한두 달마다 반지하 월셋방을 전전하던 끝에 체포돼 수감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박근혜 즉각 퇴진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후’를, 특히 위도 있지만 아래를 생각해야 한다. 결국 천대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해방되고 싶어서 하는 운동 아닌가.

건국대 학생들

“학교 법인 건국대학교는 최순실 학력 위조 연루 의혹 해명하라”

얼마 전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의 학력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최순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퍼시픽 스테이트 대학교(이하 PSU) 출신 유아교육학 박사라고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 학력을 이용했다. 그러나 PSU에는 유아교육학 전공이 없을 뿐 아니라, 최순실이 학위를 취득했다는 1980년대에는 정식으로 인가 받은 대학도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런데 최순실이 학위를 취득했다는 PSU의 소유주가 바로 학교 법인 건국대학교(이하 (학)건국대학교)이다. 당연히 최순실의 학위 위조에 (학)건국대학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

기됐다.

(학)건국대학교 측은 최순실이 2007년에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시스템에 일방적으로 PSU를 졸업했다고 등록했을 뿐,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학)건국대학교는 단순 입장 발표 외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학생들을 입막음 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학교 측은 노동자연대 건국대모임이 의혹을 제기하며 불인 대자보를 무단으로 철거했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학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향후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학생들은 최순실에게 특혜를 준 것

이 아니라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최순실을 고소하라고 요구했다. 일개 사기관이 아니라 온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이 건국대학교와 연관된 학위 위조를 했다면 명예 회복을 위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다.

(학)건국대학교는 왜 학위를 위조한 최순실이 아니라, 대학의 명예를 회복하라는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일까.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다.

(학)건국대학교가 PSU 같은 대학을 운영해 온 것도 문제이다. PSU가 ‘학위 장사’ 의심 대학으로 논란이 되자 (학)건국대학교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4개의 인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

러나 이 중 3개는 유효한 인증이 아닌 이 드러났다. 그나마 유효한 한 개의 인증조차 해당 교육 기관이 부실 심사

로 자격이 박탈돼 문제가 될 예정이다.

(학)건국대학교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해야 한다

건국대의 김경희 이사장이 골프 접대로 정치계, 법조계, 재계 전반에 로비를 벌여 왔고, 그 중에 친박계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대학이 권력에 아부하고, 마치 장사꾼처럼 학위 장사 사업을 해 왔다면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학)건국대학교는 최순실 학력 위조에 연루된 의혹을 철저히 해명해야 한다.

조연호 노동자연대 건국대 모임 회원

www.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청와대 방송과 노동조건 개악 시도에 맞서 KBS 노동자들이 파업 준비에 나서다

★ 이 와중에도 청년-노동자 이간질 정책 펴는 박근혜 정부

★ 2016년 세계 부 보고서 지독히도 불평등한 세계

★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 자원금 15억 원 수령 철회하라



사라진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어디에 있었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냐가 쟁점이다

‘세월호 7시간’이란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오전 10시 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낸 오후 5시 15분까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11월 19일 4차 범국민행동의 사전 대회로 ‘박근혜 7시간 시국강연회’가 열리고, <JTBC> ‘뉴스룸’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세월호 7시간을 파헤치는 등 세월호 쟁점이 된진 운동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11월 19일 청와대는 웹사이트에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 게 —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청와대 해명에 따르면, 같은 시각 박근혜는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 박근혜는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서면 보고를 받은 뒤 10시 15분과

10시 22분에 최초 지시를 내렸다. “철저히 구조하여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그 시각 세월호에서는 4명의 희생자와 함께 가라앉고 있었다. 박근혜는 참사가 발생한 시각(오전 8시 49분)으로부터 8시간이 지나서야 대중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게 발견하기가 힘들니까?” 그때까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 위에 둥 떠있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3백4명의 생체같은 목숨들이 배 안에 갇혀 열 손톱이 부러지도록 유리를

긁고 있던 시간에 박근혜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온 나라가 각자의 일상을 뒤로 한 채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생방송만 보고 있을 때 박근혜는 도대체 뭘 하느라 상황을 그토록 몰랐을까?

청와대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는다 해도, 박근혜는 계속 관저에서 서면이나 전화로 보고를 받기만 했을 뿐 아무 일도 안 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에게 들어간 보고들은 ‘대답 없는 메아리’였다.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 동안 관저에서 뭘 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박근혜가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써 가며 차음의원을 이용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차음의원이 박근혜의 주사제를 최순실에게 대리 처방해 줬다

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굴이 숨겨 가며 받아야 할 치료’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그 치료를 받으라 대응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은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4월 16일 당일 병원을 휴진하고 골프를 쳤다고 해명해 온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 원장이 참사 당일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는 장부가 나오기도 했다.

파하고 싶었던 상상이 점차 현실로 다가올수록 유가족들이 느끼는 심정은 참담하다. “여성 대통령에게 결례라 물 어볼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버티는 전 비서실장 김기춘을 보는 심정은 그 이상의 참담함과 분노를 가져다 준다. 전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방록에 따르면, 김기춘은 2014년 7월 18일 수석비서관들에게 “대통령의 4월 16일

동선과 위치에 관해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근혜와 청와대에게 세월호 7시간은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릴 마지막 지푸라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어코 진실을 감추려 할 것이다. 세월호 인양을 연기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박근혜 퇴진 운동의 바다로 진수하기 시작했다. 사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초기부터 세월호 운동이 함께했다. 세월호 참사도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부패가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도 하다.

국회의 지리한 교섭이 아니라 거리의 운동이 떠오를 때가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할 절호의 순간이다.

김승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결정, 한일군사협정

박근혜의 친일·친미 3단뛰기, 무효다!

11월 23일 결국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발효됐다. 국무회의 의결도 체결 조인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우파에게 자신의 존재 필요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박근혜는 초고속 밀실 처리로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종합하면, 그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결정, 한일군사협정 재추진은 모두 박근혜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게 분명하다. 11월 17일 <한겨레>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한일군사협정 재추진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들끓는 반대 목소리에 박근혜가 내놓은 답변은 이렇다. “국가 간에 이뤄지는 통상적인 협정.”

그러나 이 협정에는 세 가지 중대한 위험성이 있다.

첫째, 이 협정으로 미·일 군사동맹이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더욱 압박해 동북아시아가 더 위험해진다.

이 협정은 사드 배치의 마지막 구성물이다. 협정문을 보면, 한·일 간에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의 정보 교환이 포함된다. 거기에는 당연히 일본 교토와 한국의 X 밴더 레이더(사드 레이다)를 통해 감식된 정보도 포함된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의 미사일 정보도 포함될 것이다.

사드 배치 일정을 앞당기면서 미국은 한일군사협정이 하루라도 빨리 조인되기를 원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개 없이 한국과 일본이 직접



한일군사동맹의 시작 역사에 길이 남을 배신이자 아시아를 더 위험하게 할 것이다.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이지스함과 일본 이지스함이 한반도 주변에서 위치를 분담해 감시·경계에 나설 것이다. 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한·일 연합군사훈련도 벌어질 테다.

둘째, 한·미·일은 이 협정으로, 군비 증강의 핑계거리인 북한을 군사·정치적으로 더욱 압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는 일본 정찰위성과 해상 초계기 전력이 수집하는 정보를 한국이 공유한다며 이 협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정보기관이 수집한 북한 관료 동향 등 인물에 관한 포괄적 정보들을 얻는 데 특히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일본은 이 협정을 ‘일한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라고 부른다. 일본 <니혼게이지아이 신문>은 “정보 공유 대상은 국방 비밀 전반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과 미사일에 국한하지 않고 북한의 군사 동향 전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1월 1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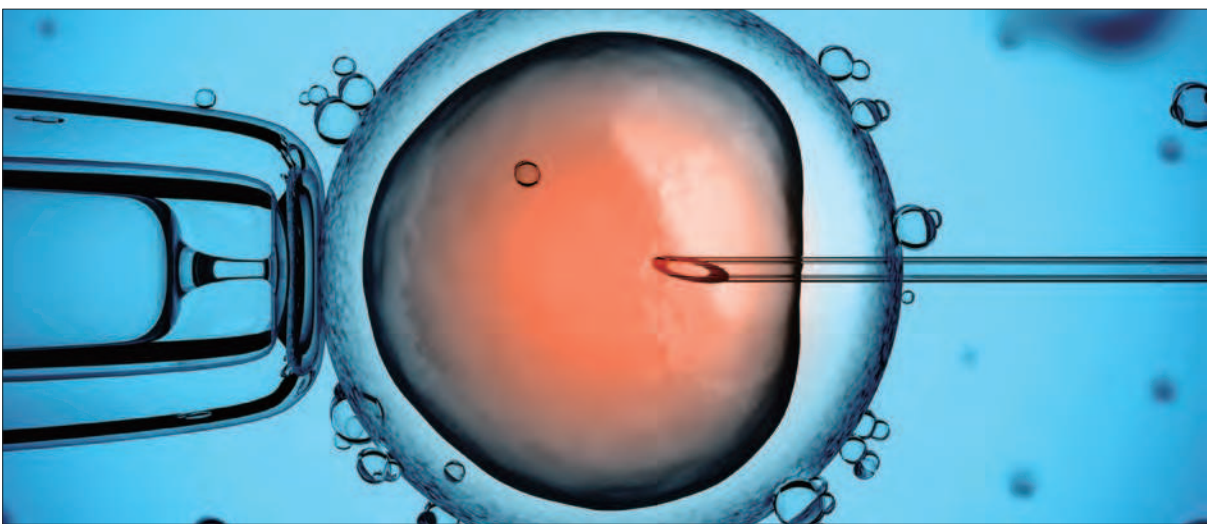
한·미·일이 ‘북한 인권’ 문제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각종 근거들을 공유한다며 이 협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정보기관이 수집한 북한 관료 동향 등 인물에 관한 포괄적 정보들을 얻는 데 특히 지대한

왜 한국 정부는 군비 증강에 더 많은 돈을 퍼부을 것이다. 본지가 지적했듯이 (184, 186호), 이 협정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생산한 SM-3 요격 미사일을 한국에 이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무기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게 될 것이다.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라도 박근혜를 하루 빨리 퇴진시켜야 함을 보여 준다.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결정, 한일군사협정 등은 모두 폐기돼야 한다.

▶ 5면으로 이어짐



박근혜의 줄기세포 환상, 무엇이 문제인가?

최규진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가 이처럼 관심을 받은 적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등 현 국정농단의 주모자들이 줄줄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문제의 7시간 동안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사실 박근혜가 그 시간에 줄기세포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적지 않다.

과연 합법적인 줄기세포 치료였는가?

현재 한국에서 심근경색·무릎연골손상·크론병·루게릭병·이 네 가지 경우 외에는 허가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없다. 이것도 전 세계에서 한국만 허가해 준 것이고, 줄기세포 연구의 메카인 미국에서조차 허가한 것이 없다. 인터넷에는 한국 식약처에서 허가 안해 준 줄기세포 치료제를 일본에서는 허가 받았다는 얘기가 떠도는 데, 잘못된 정보다. 정식 판매가 아니라 지정된 병원에서만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을 뿐이다. 부자들이 미용과 정력을 위해 맞다는 지방줄기세포도 세포 수를 늘리기 위해 배양을 하면 불법이다. 줄기세포 특성상 배양 과정에서 암세포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이 어떤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불법 여부를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줄기세포 업체들을 위한 특혜만약 대통령이 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면 큰 문제는 이러한 줄기세포에 대한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정작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데 있다. 불법·편법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데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든다. 난치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줄기세포 업체들의 과장 광고에 속아 집까지 팔아가며 이 치료를 받았다. 박근혜-최순실이 다녔다는 RNL 바

이오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뇌경색, 파킨슨병, 버거씨병, 자가면역질환에 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을 일본과 중국으로 데려가 줄기세포를 주입했다(일본 후생성 조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밝혀진 것만 두 명이 사망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음에도 줄기세포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커녕 오히려 대통령이 이런 거품을 부추기고 있었다는 게 이번 줄기세포 사태의 뿌리이다. 보건복지부라도 제구실을 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메르스로 국민이 죽어나가는 그 와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삼성합병이나 쟁기고 있었으니, 오죽하겠는가). 이 문제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믿을 만한 세력이 못된다. 이 시국에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참담재생의료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해외원정으로 행해지던 그 줄기세포 치료를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법이다.

이제라도 비로 잡아야 한다

서민들은 생활고로 주름살이 늘고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택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의 주름살은 퍼져만 가고 VIP들은 불로장생을 꿈꾸고 있다.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데 그들은 그 비싼 줄기세포 치료도 무상으로 받았다. 이번 기회에 모든 적폐를 드러내 비로 잡아야 한다. 결코 줄기세포 연구 자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황우석 사태에서 보았듯이, 잘못된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줄기세포 연구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국 그 모든 피해는 수많은 난치병 환자와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 4면에서 이어짐

머뭇거리는 주류 야당들

한일군사협정은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협정문에는 ‘협정 파기 및 자동 연장’ 관련 조항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방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파기 의사를 밝히면 내년에 협정은 연장되지 않고 파기된다. 이 외에도 협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폐지할 방법도 더 있다.

그런데 주류 야당들은 협정 폐기에 정면으로 나서지 않고 대중의 눈치만 슬금슬금 보고 있다. 11월 22일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기자회견’

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일군사협정 반대를 머뭇거린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문제 삼아 내놓은 야 3당의 국방장관 한민구 해임 건의안을 철회하자고 주장했다. 안보 쟁점을 앞세웠다가 보수층 반발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공색한 논리로 말이다. 결국 야 3당 합의로 한민구 해임 건의안은 박근혜 탄핵 표결 이후에 논의하기로 스라슬쩍 미뤄졌다.(이런 데

까지 정의당이 합의한 것은 유감이다.)

지금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한 배경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강행 등 친제국주의적 ‘외치’를 향한 반발도 있다. 그런데도 주류 야당들은 박근혜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고 좌고 우면한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주류 야당들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강화돼야 할 또 다른 이유다.

김이진

오스트리아 대선

위험! 나치가 권좌를 넘본다

12월 4일 오스트리아에서 대선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 파시스트 정당인 자유당(FPO)의 후보 노베르트 호퍼가 당선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호퍼는 4월에 치러진 1차 투표에서 35퍼센트를 득표하며 1위를 했다. 이번 결선 투표는 그가 5월 결선 투표에서 불과 3만 표 차이로 패배한 뒤 현재에 낸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져 다시 치러지는 것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당선한 것은 그의 지지자들을 한껏 고무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의회의 권한이 더 크지만, 호퍼가 승리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초로 유럽에서 파시스트가 국가 수반이 된다. 이것은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에서 파시스트와 극우의 부상을 더한층 고무할 것이다.

내년 4~5월에 대선을 치르는 프랑스에서는 이미 파시스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그가 결선에서 패배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오스트리아에서 ‘금기’가 깨진다면 르펜 바람도 더 거세질 것이다.

네덜란드도 3월에 총선을 치르는데, 파시스트 정당은 아니지만 인종차별적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인 자유당이 오스트리아 선거 결과에 따라 더 힘을 받을 것이다. 네덜란드 자유당은 이미 집권 노동당을 제치고 보수 자민당과 제1당 자리를 겨루고 있다.

이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 음과 같이 우려했다. “오스트리아는 전제 유럽연합(EU) 인구 5억 명 중 8백 50만 명에 불과하지만, 호퍼가 승리하면 파죽지세를 불러올 수 있다.”

평범한 우익이 아닌 파시스트 정당

오스트리아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단체 링크스벤데(좌선회)의 지도적 활동가 다비트 알브리히는 이렇게 말한다. “자유당은 인종차별을 이용해서 표를 얻고 다른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평범한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이 아닙니다. 자유당의 중핵은 파시스트로 구성돼 있고, 그들은 파시스트 운동을 일으키려고 인종차별을 내세웁니다.

“올해 초부터 자유당은 독일의 페기다(서방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이라는 뜻의 인종차별적 거리 운동)처럼 인종차별주의자들로 이뤄진 거리 시위대를 조직하려 합니다.”

자유당은 1956년 나치 잔당과 게르만 민족주의 세력이 결합해 결성한 정당이다. 오늘날 자유당을 이끄는 하인츠-크리스티안 슈트랄레는 유대인 혐오 대선 무슬림·이주인 혐오를 부추긴다. 그는 자신이 파시스트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어떤 시절 파시스트 청년 캠프의 일원이었고, 1980년 독일 맥주 축제 테러로 악명 높은 파시스트 조직 ‘비징 유엔트와 함께 행진하기도 했다.

자유당과 그들의 파시즘, 인종차별에 맞설 잠재력은 상당한 것이다. 관건은 이런 잠재력을 세력화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조건과 난민·이주인을 모두 방어하는 것이다.

김종환

교사들, 민주노총 반박근혜 파업에 동참한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11월 30일 파업을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는 민주노총 결정에 따라 그날 서울 집중 연가투쟁을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는 대중적 증오의 대상이지만, 전교조 조합원들도 박근혜에 이를 간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마리의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만드는데’며 전교조에 노골적인 증오를 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부터 교육 공격을 가했다. 규약시정명령과 법외노조화 등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공격하고, 공무원연금 삭감 등 임금을 깎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평가제도 악화 등 교육판 노동개악 공격을 했다.

전교조는 굴복하지 않았다. 특히 2013년 10월 조합원 총투표에서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에 무릎 꿇지 말고 저항하자는 중요

한 메시지를 노동운동 전체에 던졌다.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제조업 노동자들과는 달리 기업주의 이윤을 타격하는 경제적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러나 교사들의 연가 투쟁은 정치적 효과가 있다.

11월 30일 파업권이 없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용기 있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면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박근혜 퇴진이 교사들 속에서도 광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전교조의 노동조합 인정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같은 교사 고유의 요구를 환기시킬 수 있다.

또,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다른 부문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극심한 위기를 이용해 자기 부문의 고유 요구를 결합시켜 투쟁하도록 고무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 내내 굴복하지 않은 저항자였던 전교조가 부패한 박근혜 정부의 심장에 민주주의의 십자가를 꽂자.

정원석 전교조 수원중등지회장



교사·공무원의 연가 투쟁은 커다란 정치적 효과를 낼 것이다.

공무원노조도 연가 내고 동참한다

11월 22일 공무원노조 중집은 “박근혜 정권 퇴진! 성과퇴출제 폐기!”를 위해 11월 30일 연가 투쟁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공무원들은 “박근혜 정권 사망 선포 대회”를 열고 이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최근 공무원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합원 98퍼센트가 “박근혜 정권 퇴진”에 동의했고 95퍼센트의 조합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공무원·교사 공동 시국선언에 공무원 1만

7천4백23명이 동참하고,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1만5천 명이상이 참가했다.

이처럼 공무원 노동자들의 분노가 상당하고 이에 맞서 싸울 의사가 있으므로, 이런 분위기를 잘 이어가면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연가 투쟁에 동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노조 불인정·탄압, 성과급 확대 등으로 공무원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지금도 성과중심 임금체계 확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인용한 설문조사에서도 조합원들은 우선 폐기돼야 할 정책들로 “성과퇴출제·쉬운해

고”(77.1퍼센트)와 “공무원연금 개악”(55퍼센트)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무원들은 11월 30일 공무원들의 당면 요구도 함께 내걸고 연가 투쟁에 나설 것이다. 반값계도 전교조 교사들도 연가 투쟁을 벌이고 서울로 집결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서울로 모여 시위를 벌이면 의미 있는 정치적 효과를 낼 것이다. 이는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드높여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양윤석 공무원노조 조합원



퇴진 운동은 성과급 확대, 노조 불인정 등에 맞서 싸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3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5만 원 이상 ()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속노조 총투표

지도부의 동요에도 조합원 70퍼센트가 파업에 찬성하다

11월 23~24일 진행된 ‘박근혜 퇴진을 위한 금속노조 총파업 찬반투표’가 70.26퍼센트의 높은 지지로 가결됐다. 주요 대공장의 하나인 한국지엠지부와 기아차지부에서는 찬성률이 각각 84.4퍼센트, 79.1퍼센트로 압도적이었다.

찬반투표 기간 동안 사용자들은 ‘민주노총·금속노조에 휘둘러선 안 된다’, ‘정치파업 하면 노동자들만 손해’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 투쟁을 결코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

예컨대,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조합원 시국대회’를 열고 공장 밖으로 나와 거리 행진을 벌였다. 조선업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저지와 박근혜 퇴진을 내걸고 파업과 시위에 나섰다.

11월 12일에는 금속노조 조합원 2만여 명이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1백만 행진의 선두에 섰다. 현대차와 기아차에서도 수천 명씩 참가해 활력을 보여 줬다.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파견 확대 등 노동개악을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에 수백억 원의 빚돈을 대 준 삼성·현대차 등 재벌들에 분노를 터뜨렸다.

이런 열기 덕분에 현장에 찬반투표 공고가 난 지 1주일도 되지 않고, 주요 지부 지도부가 뒤늦게 공개적으로 파업 가결을 호소했는데도, 가뿐히 파업이 가결된 것이다.

그런데 현대·기아차 등 금속노조의 일부 지도자들은 ‘현장이 파업할 준비가 안 됐다’, ‘파업 날짜를 미리 정해 놓고 찬반을 물으면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파업 지지율이 47.6퍼센트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박유기 지도부가 파업에 열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조합원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얼마 전까지 진행된 대의원 선거 기간 동안 활동가들이 박근혜 퇴진 투쟁을 잘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가 높지만 사업장별로 지도부의 열의 정도에 따라 찬반투표 결과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난 21일 금속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의 36퍼센트가 ‘파업 찬반투표가 아니라 오늘 총파업을 결정하자는 수정안을 지지했다. 24퍼센트는 이에 더해 파업 시기를 당기고 수위를 높이자’는 수정안에도 찬성했다.

비록 현대차에서 찬성률이 절반에 못 미쳤지만, 금속노조 총파업 찬반투표는 가결됐다. 따라서 현대차 박유기 집행부는 28일 자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투쟁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파업 동참 방침을 밝혀야 한다.

기아차지부도 30일 예정된 지부 대의원 선거를 핑계로 파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김성락 집행부는 “압도적 가결이 되더라도 무조건 파업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시킨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전제는 행동 통일이다. 현대·기아차의 활동가들은 11월 30일에 모두 다 함께 파업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장에서 투쟁을 선동해야 한다.

박설

철도 파업

현장조합원들이 야당들의 파업 종료 종용을 거부하다

11월 21일 야 3당 원내대표가 철도 파업 철회를 제안했다.

야 3당은 철도 파업의 장기화가 “전적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이라면 서도, 노동자들에게 파업 종료를 종용했다. 그러면서 “국정이 정상화될 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들 대부분은 야 3당의 제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거의 두 달 동안 파업을 벌였는데 이제 와서 빈손으로 복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퇴진 압박을 거세게 받으면서도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 한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지난주에 민주당이 내놓은 궤퇴죄한 중재안(2월까지 성과연봉제 시행을 유보하고 국회 논의기구에서 합의 도출)도 거부했다.

오히려 정부는 담화문을 발표해, 철도공사 자회사 분리(분할 민영화 방안)를 앞당기고 강제전출, 인력 구조조정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노동자들은 2013년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 파업 이후 계속 공격에 시달리다가 3년 만에 반격에 나섰다. 또, 지난 한 달 동안 박근혜 퇴진



박근혜 퇴진 운동의 선두에 서 온 철도 노동자들.

운동에 누구보다 적극 나서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빈손으로 복귀하면 사측이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많은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험 많은 철도 노동자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야당들도 불신하고 있다. 과거에 이들이 집권했을 때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해, 철도 노동자들은 세 차례나 파업을 벌인 경험이 있다. 지금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성과연봉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불법적’, ‘일방적’ 추진만 문제 삼는다. 그래서 “파업을 끝내면 야당도 압박하기

어렵다” 하고 말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철도 파업을 지지해 온 정의당이 야3당 공조를 이유로 파업 종료를 종용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확대쟁대위

그런데 조합원들에게 발송된 위원장 서신에 파업 종료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에게 야 3당의 제안을 수용하지 말 것을 강

력하게 요구했다. 철도노조 확대쟁대위 회의(전국 지부장 회의)에 앞서 서울지방본부는 확대쟁대위를 소집했고, 파업 지속 여부와 파업 전술은 민주적 절차를 밟아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노동자들은 특히 확대쟁대위 회의에서 야3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파업 지속을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확대쟁대위 회의장 앞에 철도 노동자 1백50여 명이 모였다. 몇몇 지부들은 오전에 지부 총회를 마치고 집단으로 오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철도노조 사무실이 있는 철도회관 건물 로비에 연좌하고 즉석 집회를 열었다. 여러 지부장들이 야 3당 제안 반대, 파업 지속 입장을 표명하고 회의장으로 올라갔다.

회의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안전지에 나온 “현장투쟁으로의 전환”(파업 종료를 의미함) 문구는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며 삭제를 주문했다. 결국 이날 확대쟁대위 회의는 파업 지속을 결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현장 조합원들의 위대함을 보여 준 하루였다.

〈노동자 연대〉의 독자인 철도 노동자들의 제보 덕분에 본지는 김영훈 위

원장에게 야당들의 제안을 거부하자고 촉구하는 신속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리플렛으로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반포했는데, 이번 행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 그런데 공공운수노조 집행부가 이런 ‘개입’을 문제 삼은 것은 유감이다. 이는 노동자들 바람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태도다.

지금도 상당수 노동자들은 김영훈 위원장이 야3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확대쟁대위 직후 여러 직종과 지부들에서 연이어 발표된 투쟁 결의 성명들이 보여 주듯, 기층은 투쟁 지속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다.

파업 노동자들의 사업소 농성, 필공 노동자들의 ‘안전 운행’ 투쟁, 철도공사 사장 훈순만 집 앞 농성 등 투쟁 수준을 높여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필공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시키는 전술을 논의하자는 제기도 있다.

이런 제안들이 실행되면 현장 노동자들의 투지를 배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정원

독자편지

11월 30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거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ws@wspaper.org

“선생님, 촛불집회 다녀오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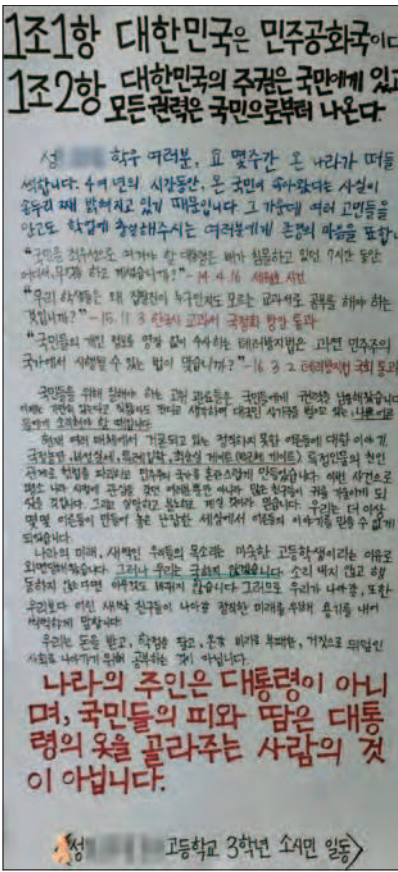
요즈음 월요일마다 학생들한테 듣는 질문이 있다. “선생님, 지난주 토요일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다녀오셨어요?”

지난주에는 사정이 있어 참가하지 못했다고 하니, “선생님 안 가셨어요? 나는 갔는데” 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는다. 엄마하고 함께 든 촛불 사진을 보여 주고, 자신이 “박근혜는” 하고 선창하니 주변에서 “아하하라” 하고 외쳤다며 들뜬 목소리로 말한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도 “이번 주에는 꼭 갈 거예요” 하고 다짐을 밝힌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우리 학교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11월 14일 학교에 대자보가 붙은 것이다.

작성자가 ‘3학년 소시민 일동’이라고 된 이 대자보는 ‘배가 침몰하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학생들이 집필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교과서로 왜 공부해야 하는지,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될 수 있는 법인지 ...’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또 얘기한다. 지금까지 미숙한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했지만, 최순실 게이트(박근혜 게이트)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나쁜 어른들에게 굴하지 않겠다고.



소리 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어린 새싹들이 나아갈 정직한 미래를 위해 용기 내어 씩씩하게 말한다고.

아이들의 행동은 어른인 내게, 교사인 내게 부끄러움을 줬다. 다른 교사들도 “학생이 선생보다 낫네” 하고 말한다.

이 대자보는 붙은 지 30분도 안 돼 관리자가 떼어냈다. 그러나 대자보를 쓴 학생들과 함께 관리자와 면담을 해, 대자보를 다시 붙이기로 했다.

아이들은 말한다. 자신들이 대자보를 쓴 것은 “대견하다, 놀랍다, 고맙다” 등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다. 우리의 행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행동이다”라고.

그래도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어른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해 줘서, 우리 학교 안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켜 줘서 고맙다고.

11월 30일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퇴진! 국정교과서 폐기! 법외노조 철회!’로 연가 투쟁을 한다.

정부는 11월 28일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발표한다고 한다. 학교 아이들은 역사 교과서인 내게 ‘국정교과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 교과서로 수업하지 말아요’ 하며 국정교과서의 등장에 두려움을 표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할 일은 자명하다. 더는 굴하지 않겠다는 아이들처럼,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11월 30일 연가 투쟁에 함께하는 것이다. 더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자.

민수연 교사

한 고등학생이 본 백남기 농민 사건

내가 이 사건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있다. 바로 나의 엄마다.

엄마는 자랑스러운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해마다 열리는 시위에도 참가하고, 여러 잘못된 문제들을 막기 위해 다양한 곳을 누비며 목소리를 내는 분이다.

그전에 나는 내심 엄마가 그런 활동에 참가하지 않기를 바랐었다. 이번 사건처럼 시위에서 경찰과 충돌해 다치게 될까봐 마냥 걱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생각은 다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결단력 있게 나서는 엄마가 존경스럽다.

고 백남기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으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시위에 참가한 것인데, 국가는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로 날려 버렸다. 나는 그것에 휘둘라치는 분노와 원통함을 느꼈다.

시위대에게 사용한 물대포는 20~30대 청년이 맞아도 비틀거리고 쓰러질 만한 위력을 가진 ‘무기’였다. 국민들의 입을 닥치게 하려고 ‘무기’

를 휘두른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깨보다 더 못한 존재로 아는 것 아닌가.

다행히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국가가 잘못 처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 측은 지금까지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다.

그들은 아마 이 사건이 정말 자신들의 잘못으로 밝혀질 경우 드러나는 죄값이 무서운 것일 게다.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심리인가? 사람이 죽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이 목소리를 내다 죽음을 맞았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속셈으로 사건을 매도하면서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모든 국민을 원통함에 빠져들게 한 대통령은 마땅한 죄값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그저 예쁜 옷을 입고 TV에 나와 입만 나불거린다고 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민의 희생과 피눈물로 조금씩 나아진 이 나라가 더는 망가지지 않고, 국민이 비로소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란다.

임희재 고등학생

